

체코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

〈보도 주요내용〉

- 10.11.(금), 경향신문은 「체코, 공식 입찰 개시 전부터 원전 수주 ‘금융협력’ 요청 정황」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
 -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‘금융 분야 협력’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.
 -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

〈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〉

-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,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, 당시에 한수원,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
 - 그러나,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,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
- 동 기사는 현재까지(시점)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(주체)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(내용)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,

-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(LOI 제출 3년 전, 입찰개시 2년 전)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,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. 이는 시점/주체/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

<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>

구분	정부 설명	보도 내용
시점	현재까지	2021년 6월 (지난 정부) (LOI제출 3년 전, 입찰개시 2년 전)
주체	체코 정부, 체코전력공사	체코상업은행 (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)
내용	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(신규원전 사업)	금융협력을 제안함 (원자력 파이낸싱,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)



시점 / 주체 /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

□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

-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,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(LOI)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
 -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, 한수원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,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
 -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, 입찰개시 2년 전,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
 - 2021년 5월, 체코상업은행(CSOB)*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
- * (CSOB) '64년 체코 정부 설립 → '99년 민영화, 체코 최대 상업은행(총자산 기준)
- 이에 따라,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,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, 무산되었음

-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/주체/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
-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
-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, 시점/주체/내용이 전혀 다른 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

담당 부서	원전수출협력과	책임자	과 장	문준선 (044-203-5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홍 (044-203-5282)

